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

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



2016. 8. 31

산업통상자원부

목 차

1 추진 필요성

2 문제점

3 개선방안

산업통상자원부

외투기업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

전국 8개 구역 95개 지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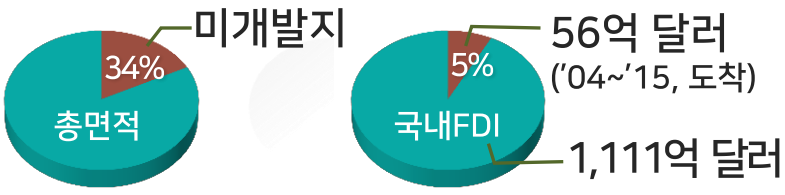
* 여의도 면적(2.9㎢)의 111배, 외투지역 면적('15년, 17㎢)의 19배 수준

구 분		지정일	최초면적	현재면적	지구
1차	인천	'03. 8.11	209㎢	124㎢	34개
	부산·진해	'03.10.30	104㎢	51㎢	19개
	광양만권	'03.10.30	89㎢	78㎢	21개
2차	황 해	'08. 5. 6	39㎢	4㎢	2개
	새만금·군산	'08. 5. 6	67㎢	28㎢	3개
	대구·경북	'08. 5. 6	55㎢	20㎢	8개
3차	동해안권	'13. 2.14	8㎢	9㎢	3개
	충북	'13. 2.14	9㎢	7㎢	5개
합계			580㎢	321㎢	95개

성 과

- 입주기업 2,189개사
- 고용인원 96,449명

반 성



1 그간 기존 주력산업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하였으나 한계에 봉착

-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주력산업 분야 신규투자 실적이 감소

  * 국내 조선 수주량 95% 감소('16.1~5) /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7.2억 톤('15년)

- 다양한 특구제도로 인해 경제자유구역만의 우위 요인이 부족

  * 경자구역, 외투지역, 자유무역지역, 기업도시, 연구개발특구 등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

  * 국내 FDI는 2015년 200억 달러를 신고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 FDI는 15억 달러 내외

-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비해서도 외투 유인효과와 실적이 미흡

  - 조세감면 인센티브는 유사하나 수요자가 개별형 입지를 선호

  * 면적대비 외투실적은 개별형 외투지역(6.75억불/㎢)이 경자구역(0.17/㎢)의 약40배

2. 문제점

2 경제자유구역 명칭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가 불충분하다는 건의가 있어옴

- 경자구역의 규제완화 Test-bed 역할 부족
- 신산업 조기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경자구역에서 시범 실시 후 경자구역 밖으로 확산시키는 등 규제개혁 선도 특구로 위상 재정립 필요

3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이 부족하여 중점유치업종 중심의 산업기반 형성이 미흡

-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제공되어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에 대한 유인이 부족

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유치 촉진대책 긴요

3. 개선방안

정책방향

1. 주력산업/외투기업 유치에 더하여 신산업/국내기업 유치로 확대
2.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및 특례 확대
3. 국내외 기업 간 융합 환경 조성

추진과제

1. 중점유치업종 확대
2. 유망 신산업 육성
3. 외국 교육 및 의료 기관 유치 활성화
4.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
5. 중점유치업종 국내기업의 유치 확대

1 중점유치업종을 신산업 등으로 확대

현재



기존 주력업종

철강, 조선, 석유화학



서비스업종

공항 · 항만물류, 의료



첨단업종

IT, BT 등

확대방향

- 지역의 산업기반, 지역발전전략, 글로벌 산업동향, 지역전략산업 고려
-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, 유망 신산업 포함
- 지식서비스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추가

중점유치업종 확대

현행 중점유치업종

+

추가

- 에너지신산업
- 농생명
- 바이오
- 미래형자동차
- 융복합소재 등

참고

지역전략산업과 유망 신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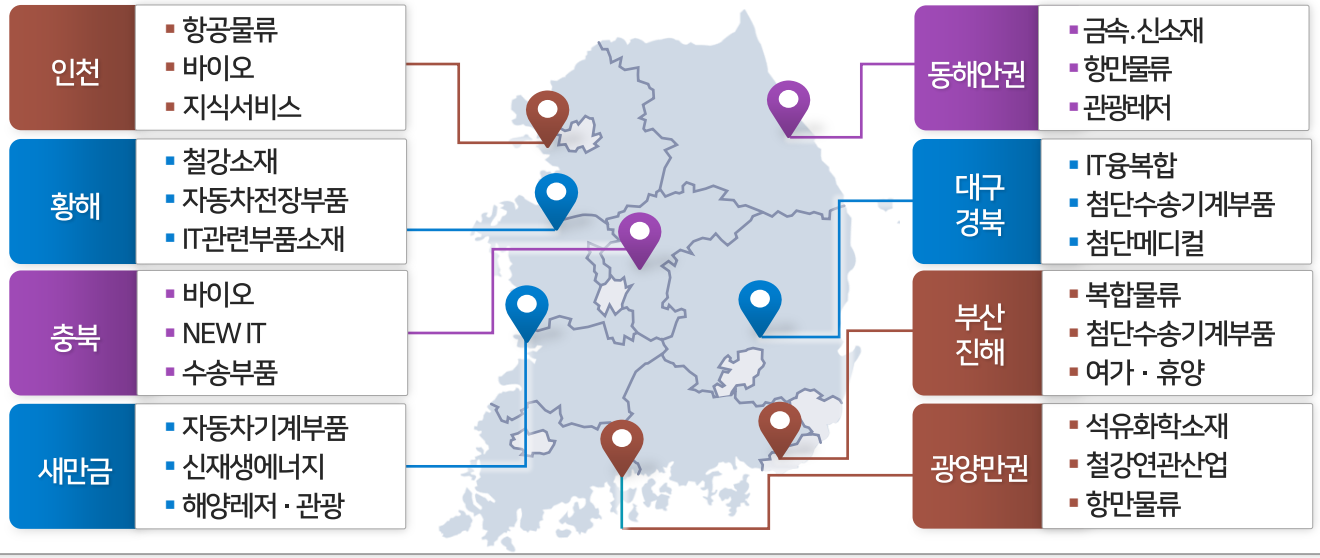
지역 전략산업 (27개)

- 해양관광
- IoT융합 도시기반서비스
- 지능형기계
- 항공산업 (항공부품인증)
- 에너지신산업 (전력SI, 화학소재 포함)
- 드론(무인기)
- 자율주행자동차
- IoT 기반 웰니스
- 스마트기기
- 타이타늄
- 탄소산업
- 농생명
- 스마트헬스케어 관광
- 바이오의약 등

유망 신산업 (11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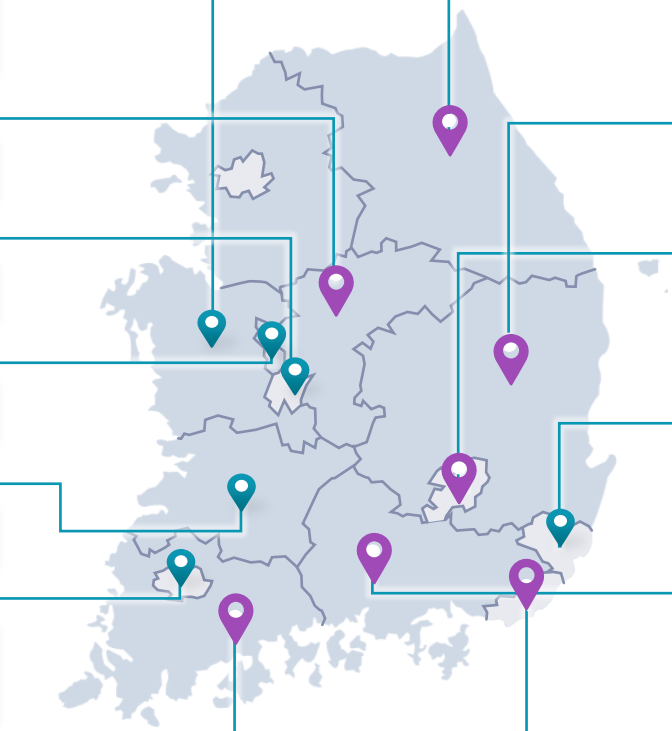
- 미래형 자동차
- 지능정보
- 차세대 SW 및 보안
- 콘텐츠
-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
- 차세대 방송통신
- 바이오·헬스
- 에너지신산업·환경
- 융복합 소재
- 로봇
- 항공·우주

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 현황('13.7월 제1차 기본계획)



참고

규제프리존 연계 지역전략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
(*붉은색 : 경자구역 중점유치업종과 일치하는 산업)



충청남도
- 태양광
-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

충청북도
- 바이오의약
- 화장품

대전광역시
- 첨단센서
- 유전자의약

세종특별자치시
- 에너지 IoT

전라북도
- 탄소산업
- 농생명

광주광역시
- 친환경자동차(수소융합스테이션)
- 에너지신산업(전력변환 저장)

전라남도
- 에너지신산업(전력SL, 화학소재)
- 드론

제주특별자치도
- 스마트관광
- 전기차인프라

강원도
- 스마트 헬스케어
- 관광

경상북도
- 스마트기기
- 타이타늄

대구광역시
- 자율주행자동차
- IoT 기반 웰니스산업

울산광역시
- 친환경자동차(부생수소 활용)
- 3D 프린팅

경상남도
- 지능형기계
- 항공산업(항공부품인증)

부산광역시
- 해양관광
-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

2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개선 및 특례를 확대

- **유망 신산업 육성**을 위한 규제 완화(예시)

1. 경자구역 내에서는 경자청장 고시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우선구역을 설정하고,
2. 의료연구개발 특허를 우선 심사하는 등 **유망 신산업 육성**을 위한 규제 특례를 마련

- **외국 교육 및 의료 기관 유치 활성화**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

교육기관

- 외국교육기관도 IT 등의 특별과정과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
- 유치 대상을 세계 유수의 종합대학 위주에서 패션, 예술 등 전문분야 대학으로 확대
- 외국학교법인에서 외국학교법인의 자법인과 국내외 합작법인으로 설립주체를 확대

의료기관

-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50% 이상에서 49% 이상으로 완화

2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개선 및 특례를 확대

- 경제자유구역 개발촉진을 위해 외투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, 마리나 항만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

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	▪ 최소지정 면적 기준을 33만㎡에서 16만㎡로 완화 * 「외투기업의 입주수요가 지정예정 면적의 60% 이상이고, 광역시 · 도 내에 이미 지정된 외투지역의 입주율이 80% 이상」인 여타 요건은 현행 유지
경제자유구역 내 마리나 항만 개발	▪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마리나 항만 조성 시 항만구역 지정, 사업자 지정,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경자구역의 개발 절차에 연계하여 일원화 * 경자구역이 지정되면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* 경자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마리나 항만 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* 경자구역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마리나 항만 실시계획도 승인된 것으로 간주 등
농지, 산지 전용 개발	▪ 개발예정지 내 산지, 농지가 많아 개발 시 전용 부담금이 과다한 경우 개발예정지 내 산지, 농지를 산업단지, 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 *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% 감면

3 중점유치업종의 국내기업 유치를 확대

임 대

-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*에 대한 공유지 20년 임대 제도를 경자구역에 입주하려는 창업초기 기업 등 국내기업에 적극 적용
  *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인 공장, 연구소 등
- 외투기업 대상의 장기임대산업용지*(50년) 조성 시 국내기업의 입주도 허용
  * 경자구역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 · 물류시설용지의 일부를 50년간 임대 가능한 장기임대산업용지로 운영할 수 있음

재임대

- 임대로 입주한 외투기업이 토지·건물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재임대할 수 있게 허용
  * 부작용 방지를 위해 경자청장이 인정하는 협력업체에 한정하고, 사후관리 실시

수도권입지

- 인천과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·증설을 지원

“경제자유구역이 **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구심점**으로
자리매김하도록 **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**와 **규제개선 과제**를
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”

감사합니다

산업통상자원부